



21세기를 대비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견해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위상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의 대담 내용을 소개한다.



늦게나마 노동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노동계에 부임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와 취임 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정, 실업문제 등 노동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노동부장관의 중책을 맡아

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신명을 바쳐 일할 각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면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이 행복해 지고, 기업도 재해로 인한 손실이 감소되어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구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은 노·사·정 모두의 공동이익을 키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재해의 예방은 노·사간에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인명의 존

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바탕 위에서 노·사 공존공영의 새로운 안전문화가 산업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과 규제개혁 등으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조직 등이 축소되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소홀히 될 우려가 있고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각분야에서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치러왔고 그결과, 빠른 속도로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전·보건규제개혁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행정적·절차적 규제 등 노·사에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개선·폐지한 데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조치기준 등은 모두 존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들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3월부터 제조업 재해율이 증가추세로 반전되는 등 과거 경제침체후에 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오히려 각 사업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감량경영 과정에서 축소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복원토록 적극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해당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

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자율안전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규제를 통한 안전』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도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율안전관리는 재해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돈독한 신뢰감 회복과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진외국의 안전보건 정책방향이 책임을 동반한 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해예방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자율안전관리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미 올해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보급·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자율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계량화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자율을 빌미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게을리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법적·경제적인 제재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집2

현재 정부와 학계, 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1세기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4월 12일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이 발족된 이래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안은 7월 2일 개최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노·사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21세기 산업안전 선진국』의 비전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지식화 시대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구조면에서는 임시·파견직 등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저하가 우려되고, 여성·고령근로자의 증가로 보건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구조면에서는 벤처기업의 대량 창업,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의 발달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 취약부문이 늘어나고, 1·2차산업 및 건설·운송산업 등의 대형화 및 자동화 추세와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으로 대형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예방투자 효과의 과학화 및 계량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련 기관의 전문성제고 및 상호 역할분담체제 확립과 안전보건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중·소규모 기업의 산재예방과 신종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대형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여성·고령근로자 증가 등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기준의 개선 및 신종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규제완화조치로 재해예방기관이 혼재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과당경쟁으로 대 사업장 서비스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규제개혁의 근본 취지는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선택은 고객이 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련단체의 경우도 동일한 방침에 따라 설립요건이 완화된 것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율과 경쟁이라는 규제개혁의 취지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련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련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와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가능여부를 가늠하는 인력·시설·장비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차등관리』하므으로써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련단체의 지도·자문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감독을 최소

화하므로써 안전보건관련 단체의 지도·자문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기금은 산재보험료의 일부로서 실수요자인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부 출연기관에만 집중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진단, 교육, 검사 등 비용이 수반되는 활동에 직접지원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현재 산재예방기금의 상당부분을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산재예방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통해 노·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진단, 교육, 검사 등 개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산재보험료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재예방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재원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7.1 산업안전보건일의날을 맞아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고통과 인내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해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노·사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되는 등 산업안전분야가 한단계 성숙·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의 주체가 되는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노와 사가 그간의 분배중심의 투쟁, 권위주의적인 경영, 집단이기주의 추구 등 대립과 갈등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벗어 버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공존공영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가 산업안전분야에 적용·정착되기 위해서는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여러분들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수익성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도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섬으로써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전의 객체라는 수동적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에 따른 차등관리제도나 안전인증제도 등 자율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노·사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재해예방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